



후보자 등록 시작 16일부터 5·31 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시작되자 광주·전남지역 후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광주시 또는 전남도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왼쪽부터 조영택(열린우리당)·한영(한나라당)·박광태(민주당)·오병윤(민노당) 광주시장 후보와 서범석(열린우리당)·박재순(한나라당)·박준영(민주당)·박용두(민노당) 전남지사 후보 <기호順>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희망의 날 지방선거 D-14

# “5·18 호남표심 잡아라”

5·31 지방선거를 2주일 앞두고 여야 4당이 17~18일 '5·18 광주'에서 선거운동을 본격 접한다.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건 경쟁에 돌입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물론 '불모지 개척'에 나선 한나라당과 '지지를 2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선거운동의 스타트를 끊는 것. 공교롭게도 이번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은 18일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같은 날이다.

## 기념식 참석·5·18묘지 참배·필승 결의대회 4당 지도부 총출동 광주서 선거운동 발진

◇열린우리당=정동영 당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5·18 기념일인 18일에 맞춰 대거 광주에 집결한다. 정 의장과 김덕규 부의장, 강봉균 정책위 의장, 염동연 사무총장 등은 이에 앞선 17일 오후 4시 상무지구 5·18기념문화관에서 '5·18 정신계승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5·18 사적지 도보순례에 나선다. 이어 이날 저녁에는 광주지역 원로들과 만찬을 함께 한 뒤 밤 9시 무등파크호텔에서 지방선거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5·31 필승결의대회'를 갖는다. 정 의장 등 지도부는 18일 오전 6시30분에는 무등산장 입구에서 너털결약수까지

방선거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오전 11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이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광주지역 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순회 방문하고 5·18 전야제 행사에 참석한다. 민주당은 이원영 의원과 문재인 전 수석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가 18일 광주로 총집결한다. 지도부는 5·18 행사 참석 뒤 광주시당으로 자리를 옮겨 선대위 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전의를 다진다. 한나라당은 이날 광주 지역 유세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뒤 다른 지역 일정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당 후보 지지율을 두자릿수대로 끌어올려 내년도 대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노동당=최고위원 및 의원단 전원이 17~18일 양일간 광주에 총출동해 5·18 광주정신 계승과 지방선거 승리의 출정을 전국에 알린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와 강기갑 의원 등은 17일 오전 10시30분 오병윤 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5·18 광주항쟁정신계승과 광주 필승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18일에는 각 구별 출근유세에 이어 기념식에 참석한 뒤 중앙선대본부 출정식을 개최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與 “광주·전남 또 악재...” 한숨

## ■문재인 前민정수석 ‘부산정권’ 발언 파문 野 “지역감정 조장” 맹공...與 내부서도 반발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참여정부는 부산 정권”이라는 발언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을 일으키는 등 지방선거를 2주 앞둔 정치권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민주당과 접전을 펼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문 전 수석의 발언이 이원영 의원의 '5·18 발언'과 광주시장 후보 전라감정에 이어 광주·전남 선거에 악재가 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여론에서는 문 전 수석의 발언에 대해 '부산 민심에 대한 하소연'이라는 옹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 등 호남에서는 참여정부가 나름대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 등 영남권에서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 전 수석이 하소연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그동안 참여정부가 영남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호남정권'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광주 등 호남에서는 '영남정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 전 수석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감정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16일 문 전 수석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과 선관위의 조사를 요구했으며 민주당은 '사기극'을 중단하라며 공세를 나섰다. 여당 내부에서도 문 전 수석의 발언에 대한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당내 대표적인 통합론자인 염동연 사무총장은 “전통 민주세력의 통합이 안 된다면, 한나라당의 집권에 찬성한다는 말인가”라

고 직격탄을 날렸다. 염 총장은 또 문 전 수석이 참여정부를 '부산정권'으로 규정할 때 대해서도 “광주와 호남이 참여정부를 탄생시켰다. 부산정권이라는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광주가 지역구인 양형일 의원도 “부산에서는 호남정권이라는 말을 듣고 광주에서는 부산정권이라는 말을 듣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문 전 수석의 발언은 사려 깊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수석은 지난 15일 부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APEC 정상회의, 신항 및 북항 재개발, 인사문제 등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만큼 부산에 신경쓰고 지원했다”며 “대통령도 부산 출신인데 부산 시민들이 왜 현 정부를 부산 정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문 전 수석은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지방선거를 독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김완기 前수석도 “참여정부는 영남정권”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의 발언으로 참여정부가 호남정권인가 영남정권인가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김완기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참여정부는 영남정권”이라는 해석을 내려 이목을 끌고 있다. 김완기 전 수석은 16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참여정부는 영남정권이라는 생각”이라며 “정확히 말하면 참여정부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창출한 PK(부산·경남)정권”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에 대해 거부 의사를 갖고 있다”는 문 전 수석의 발언과 관련 “민주당



과의 통합에 노 대통령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전남 출신인 김 전 수석이 참여정부가 부산 정권이며 민주당과의 통합에 노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한민국 희망 CEO

# 국민여러분, 힘내세요 한나라가 있잖아요

지난 3년, 대한민국의 행복을 광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원서를 100번이나 쓰고도 취직이 안돼 어깨를 떨군 젊은이들-  
대출발이 시작된 식당이 파리를 날리자 목숨 같은 순간들을 부셔버린 상인들-  
노정권 들어 국가부채만 114조원 증가하였고 국민 1인당 514만원, 가구당 1,570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희망 CEO, 한나라당에 맡겨주시시오. 잃어버린 3년, 겨우로간 3년! 한나라당이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

www.hannara.or.kr

Ok! 경제 살릴 한나라 한나라당